

북한의 화폐

심규석 / 내외통신 기자

자 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 또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물론 가치 척도, 유통, 지불, 저축 수단 등 대부분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의 무가치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86년 9월 발행한 「사회주의화폐제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화폐는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하였다가 그 존재의 객관적 기초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경제 범주이다. 결코 영원성을 띤 경제 범주가 아니다. … 상품 화폐 관계의 경제적 기초를 생산물에 대한 소유의 분화에서 찾는 입장에 설 때, 여러 생산 방식에 걸쳐 존재해온 상품 화폐 관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면 없어진다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화폐제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화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기능은 강화되어 있다. 「김일성저작집」 23권 457

쪽에는 상품과 화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 화폐 관계가 있게 되는 것도 역시 사회적 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에서 화폐는 사회적 분업 및 소유 관계에 기초해 유통 수단과 지불 수단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다.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불리는 북한 당국의 임의적인 가격 조작으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론상 중점이 두어져 있는 유통 수단과 지불 수단은 단순히 ‘전표’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저축 기능은 실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 개혁 조치가 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것, 등가물로서의 단일 가격이 아닌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서 이같은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서 화폐의 유통은 크게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통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금 유통

통이란 상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무현금 유통이란 기업소 상호간에 원료 자재 설비 등 생산 수단을 구입하는 체계를 말한다. 즉, 직접 돈이 오가는 개인과 상점, 기업소와 상점간의 양자간 거래를 현금 유통이라고 하며,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통한 기업소간의 3자간 거래를 무현금 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금 유통의 경우 상품은 공장·기업소 → 상업망 → 주민 순으로 이루어지며 현금은 중앙은행 → 공장·기업소 → 주민(농민은 결산 분배시의 현금 수입, 근로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생활비) → 상업망 → 중앙은행으로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무현금 유통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무현금 유통은 원자재만이 오가며 결제는 기업소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와의 큰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상당한 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북한에서는 무현금의 회전 속도를 '1'로 보고 있으며 유통량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북한은 ① 통화량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② 은행 기관의 업무량을 폭증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제적 의의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현금 유통은 사회 총거래 측면에서 볼 때 현금 유통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불 수단으로서 북한의 화폐는 일반 화폐와 특수 화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권과 주화이며, 특수 화폐란 '외화와 바꾼 돈표'를 일컫는다. 중앙은행권은 "은행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유통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 화폐로서 민족적 형식을 갖추고 국내에서 완전 가치화된 화폐 즉, 금을 대신하여 유통되는 화폐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유일적으로 유통시키며 상품과 금을 비롯한 재부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는 민족화폐"(사회과학출판사(1982년), 「사회주의의 화폐제도」)로 규정된다. 북한이 중앙은행권을 처음 발행한 시기는 화폐체계 확립 시기인 1947년 12월 일제시대 및 해방 후에 발행된 조선은행권을 북조선은행권과 1 : 1로 교환한 화폐 개혁 때로 볼 수 있다.

주화는 "주민과 국가 및 협동단체 기관·기업소 사이의 소규모 지불 거래와 상품 유통을 매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상품 거래에 봉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화가 처음 출현한 것은 1959년이다. 해방 후에도 존재했으나 당시의 인플레이로 유통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러다 1959년 화폐 개혁을 통해 1원권을 만들며 유통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1원 짜리 알루미늄화가 새로 발행돼 기존의 1원 짜리 중앙은행권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외 무역 결제와 외화 교환시 사용되는 준화폐인 '외화와 바꾼 돈표'는 1979년의 화폐 개혁 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우리에

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외화와 바꾼 돈표'는 외화의 부족과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발행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화폐와 교환해주는 돈표와 서방 국가 화폐와 바뀌주는 돈표가 있으며, 다시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197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나, 1988년부터는 무역은행으로 발권 업무가 이관됐다.

'외화와 바꾼 돈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화폐제도의 특징인 자주성·유일성·계획성·공고성 가운데 앞의 두 가지와 밀접히 연관된다. 자주성이란 국내 화폐 유통에서 어떤 외부 영향도 배제하며 이를 위해 외화의 유통을 불허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일성이란 법화외의 통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외화는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1947년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의 조치를 통해 현재의 화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경제권에서 화폐 개혁은 물가와 경기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위적·통제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용어상 화폐 개혁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화폐 개혁과 화폐 교환을 구분하며 화폐 개혁을 "낡은 화폐

제도를 청산하고 새사회제도의 요구에 맞게 화폐제도를 세우기 위한 화폐 유통 분야에서의 변혁"으로, 화폐 교환은 "이미 수립된 화폐제도는 그대로 두고 가격 기준과 액면 구조를 합리적으로 변동시키는 등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낡은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바꾸는 사업"으로 정의한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2), 「백과사전」 4권, p. 842). 북한이 1947년 화폐 개혁 이후 수차례 단행한 통화 조치를 화폐 교환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화폐 개혁은 대부분 개인을 비롯해 기관·기업소·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1959년 2월의 조치는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누증과 경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1979년 4월과 1992년 7월에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의 무리한 준비로 인한 산업 재원 부족 및 화폐 회수에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화폐 개혁은 1959년에 구권과 신권을 100 : 1의 비율로 교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 : 1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이들 조치 가운데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첫째, 1979년 실시된 화폐 개혁시 이른바 '주체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이전의 화폐에 있던 어선, 대동문, 대동교, 금강산 등이 김일성 초상, 주체군중상, 천리마상 등으로

대체됐다.

둘째, 1995년 11월의 조치는 '외화와 바꾼 돈표'만이 교환 대상이 됐으며 교환 비율도 완전하게 1 : 1이었다. 이는 외화의 뇌물화 경향을 차단하고 지하경제권의 외화를 제도경제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화폐 단위는 '전'과 '원'이며, 액면체계는 1 원, 5 원, 10 원, 50 원, 100 원 짜리 지폐 5 종과 1 전, 5 전, 10 전, 50 전, 1 원 주화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돈의 가치는 미화 1 달러당 2.1~2.18 원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640~670 원(1 달러당 한화 1,400 원 기준)에 달한다. 그리고 특수 화폐인 '외화와 바꾼 돈표'는 1 원, 5 원, 10 원, 50 원 및 1 전, 5 전, 10 전, 50 전 총 8 종이 있다.

가치 척도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화폐는 계획 경제에 따라 단일한 가격을 형성한다. 그러나 농민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국정 가격보다 80~100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를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해주며 상품의 유통을 증대해주는 특수한 상품 즉,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노는 상품"으로 적고 있는 북한의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등가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경제난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유통

망인 국영 상점들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원자재 부족, 생산 설비 노후, 산업 자금 부족 등으로 국가유통망이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국가유통망에 기대지 못하는 주민들이 농민 시장을 찾게 되며, 상품이 적시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화폐도 회수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 시장의 경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소규모였고 거래 품목도 적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고, 공장·기업소에서 차익을 노리고 빼들린 상품을 비롯해 거래 금지 품목들까지 등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망이 붕괴됨에 따라 형성된 이중 가격의 실상은 지난 1994년과 현재의 것을 비교해볼 때 여실히 드러난다. 생필품의 경우 차익이 3 원에서 10 원으로, 세탁 비누가 4 원에서 30 원으로, 담배가 15~20 원에서 45 원으로 각각 올랐다. 식품류도 많이 뛰어 1 kg당 쌀은 25 원에서 65~73 원으로, 옥수수 15 원에서 40~70 원으로, 닭고기는 160 원에서 350 원으로 올랐고, 돼지고기의 경우는 45 원이던 것이 200~250 원으로 대폭 뛰었다.

공산품은 더욱 놀랄 만한 가격이다. 2만 5,000 원 전후였던 일본산 컬러 TV가 3만 5,000 원에 거래되고 있고, 흑백 TV도

6,000~8,000 원에서 1만 2,000~1만 4,000 원 한다. 일반 노동자·사무원의 한 달 임금(생활비)이 70~100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흑백 TV는 10 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의 한 벌·돼지고기 1 kg 도 두세 달 임금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화폐 가치의 이같은 하락은 대외 환율 부문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북한은 고정환율제에 의한 공정 환율, 무역 환율, 비상업 환율 등의 복수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환율은 무역 환율을 일컫는 것으로 통상 1 달러당 2.1~2.18 원의 가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7년 6월 유엔개발계획에 통보한 '나진·선봉의 새 경제 정책 및 조치'에서 1 달러당 교환 비율을 200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의 경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미화 1 달러가 북한원화 70~80 원에 거래됐던 것을 볼 때, 이번의 것은 나진·선봉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가치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약 100 배가 상향 조정된 이 환율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화폐는 저축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등 마땅한 축재 수단이 없으며, 이에 따라 화폐 자체가 축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3~4%로 낮고, 대출과 예금 인출마저 어려워 주민들은 은행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장롱 깊숙이 숨어든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월 10 원 이상 무조건 저금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고 급기야 수차례에 걸친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화폐는 사회주의화폐이론과는 달리 무질서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화폐제도를 "자본주의화폐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한 새형의 화폐제도"라고 선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원에 의한 통제' 즉, 기관·기업소의 경영 활동에 대한 당국의 화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법을 새로 제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현 경제 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지금의 생활이 戰後에 비기겠는가"라고 위안하며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공허한 낙관론만을 주입하고 있다.

화폐가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당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화폐 흐름은 앞으로 왜곡될 것이며, 내자 동원마저 어려워져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㉞

< 만화 북한기행 >

경협! 조작!

經協 製作

> 허어그림 <

